

표심 어디로, 與 압승 vs 범야권 돌풍

441명 선출... 텃밭 민주당 vs 野·무소속 격돌

“압도적 지지” “독점 타파” 총력전, 사전투표 전남 1위 곳곳 과열 혼탁 후유증 우려...첫 중대선거구 ‘주목’

441명의 광주·전남 일꾼을 선출할 6·3 지방선거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무소속 후보들은 마지막 주말을 승부처로 보고 사활을 건 D-3 유세전을 펼쳤고, 남은 기간 지지층 다지기과 부동표 흡수에 올인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선거는 40년 만의 행정통합 이후 치러지는 첫 역사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 경제론’ 등을 앞세운 범야권 후보들이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가 격전지 판세, 역대급 투표율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격전지를 중심으로 과도한 비방과 흑색 선전도 난무해 선거 후 후유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6·3선거를 통해 광주·전남에선 초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광산을 국회의원 한 명씩을 비롯해 시·구·군 기초단체장 25명(무투표 2곳 제외), 초대 통합시의원 91명, 풀뿌리 기초의원 320명 등 모두 441명의 일꾼이 탄생할 예정이다.

768명이 출마한 가운데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446명으로 60% 가량 차지하고, 조국혁신당 80여 명, 진보당 60여 명,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각각 10여 명으로 뒤를 잇고, 기본소득

당, 개혁신당 등은 한 자릿수, 무소속은 140여 명이다.

첫 통합시장은 5명, 통합교육감은 4명, 광산을 보선은 6명이 링위에 올랐고, 기초단체장은 광주가 2대 1, 전남이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본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각 후보들은 광주·전남 구석구석을 돌며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민주당 후보들은 ‘원팀과 국정 안정론’을, 국민의힘은 ‘30% 득표율과 독점 타파’를, 진보당은 ‘강한 2등 주자론’과 골목상권 살리기, 정의당은 ‘거대 양당 심판’과 상생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의 텃밭 수성과 역대 최고 투표율 여부로 압축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 불릴 만큼 민주당 당세가 지배적인 가운데 ‘호남 메가톤’을 앞세운 조국혁신당과 ‘일당 독점 타파와 견제 정치’를 강조한 진보 야당, 무소속 후보들의 도

전이 만만찮아 곳곳에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광주는 민주당 압승 분위기가 짙은 반면 전남에서는 안방 사수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 맞서 탄탄한 지역 기반과 인물 경쟁력을 앞세운 무소속·야권 후보들이 곳곳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혼전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진, 순천, 함평, 담양, 신안, 완도, 진도, 광양, 여수 등 9곳이 예측불허하다. 지방선거 때마다 적게는 4~5곳, 많게는 7~8곳에서 비민주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승리한 바 있어 이번에도 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또 다른 관심사는 투표율로, 민주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6명이 도전장을 내고 사흘 후 유권자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특별시장과 보궐선거는 ‘안방 강자’ 민주당 강세가 두드러지고, 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선 현직 강세와 진보진영 반란이 혼재된 가운데 통합 후 첫 선거 투표율에 관심이 쏠린다.

통합 전 2022년 선거 당시 광주

‘6·3 선택’ 주요 변수와 관전 포인트는 통합 후 첫 시험대...민주당 압승이나, 대안 세력 돌풍이나

정권 교체 후 첫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통합 시장·교육감에 누가 당선될지, 터줏대감 민주당이 압승할지, 범야권의 거센 도전에 고전할지, 직접 지방선거 전국 최저 투표율의 오명에서 벗어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여성·청년 후보들의 성적표와 전국 첫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유일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와 함께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 후폭풍과 2024년 총선 물결이 여파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달 3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초대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5명, 교육감 선거에는 4명,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6명이 도전장을 내고 사흘 후 유권자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특별시장과 보궐선거는 ‘안방 강자’ 민주당 강세가 두드러지고, 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선 현직 강세와 진보진영 반란이 혼재된 가운데 통합 후 첫 선거 투표율에 관심이 쏠린다.

통합 전 2022년 선거 당시 광주

시장과 전남지사 1위 득표율은 나란히 75%, 교육감은 각각 35%와 45%를 기록했고, 광산을 직전 총선(2024년) 당선인 득표율은 84%에 달했다.

25개 시·구·군 기초단체장(무투표 2곳 제외) 선거 결과도 관심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강진, 순천, 함평, 담양, 신안, 완도, 진도, 광양, 여수 등 무투표 9곳(35%)이 예측 불허 혼전세다.

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과 대통령 후광을 앞세워 압도적 승리를 기대하는 반면 무소속과 야당 후보들은 ‘일당 독점의 부패와 정체를 부른다’며 민주당 야성에 도전장을 내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안이 61.31%로 전국 기초단체 사전투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진도, 함평, 강진, 담양 등 상당수 격전지의 투표율이 50%를 넘기면서 ‘아연인수식 해석’과 별개로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로도 이어질지 주목을 끈다.

나주 사전투표율 38.06% 전남 시 단위 최고

나주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전남 5개 시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실시한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 9만957명 중 3만842명이 참여해 투표율 38.06%를 기록했다.

이는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17.86%), 제7회(30.22%), 제8회(29.49%)를 넘어 역대 나주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최고 기록도 새로 썼다.

나주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층과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진행했다.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투표편의 지원 제도 안내도 병행했다.

지역 상인들도 투표 참여 인증 시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 진행을 통해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전남 서남권 집중유세 나선 정청래 대표와 민형배 후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지난달 30일,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전남 서남권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다.

교육감 선거 중반 판세 1강·2중·1약 후일 총력...부동층 흡수·교육통합 정책 등 주요변수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교육감을 뽑는 6·3 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반 판세는 ‘1강·2중·1약’으로 분석된다.

후보들은 사전투표율이 전남 전국 1위(38.95%), 광주 3위(27.83%)로 4년 전 지방선거보다 높아진 것을 바탕으로 유불리를 따지며 막판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다.

공표 금지 직전 전남광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김대중 후보 1강, 이정선·장관호 후보 2중, 강숙영 후보 1약 양상을 보이고 있다.

KBS광주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대중 후보 33%, 이정선 후보 15%, 장관호 후보 14%, 강숙영 후보 5%로 나타났다.(한국갤럽, 조사일시 5월22~23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선거 초반 예비후보가 한 때 10명에 달했다가 단일화와 지지선언 후 4명으로 압축되면서 김 후보와 장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동층이 33%에 달한 점은 선거 막판까지 변수다. 더욱이 정당 없이 치르는 교육감 선거가 후보자 이름 석자 알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 ‘깜깜이 선거’가 이번에도 우려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지난 8회 지방선거보다 광주 10.55%포인트, 전남 7.91%포인트 상승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현직 광주시교육감인 이정선 후보, 전남도교육감인 김대중 후보,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선정한 장관호 후보는 높은 투표율이 각자 득표율과 어떻게 연동될지 쟁점이 분주하다.

행정통합에 따라 선거권역이 전남광주 하나로 통합된 것은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다. 교육감 후보들이 정당 조직 도움 없이 전남광주 전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 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후보들은 전남광주가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탓에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 옷을 맞춰입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뉴스

정청래, 지방선거 텃밭 호남 표심 단속...“못나도 내 부모·자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텃밭 호남에서 집토끼 표심 단속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완도군 완도읍에서 열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우홍섭 완도군수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힘을 실어드린다는 마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선거”라고 했다. 또 “완도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과 법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부, 민주당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 무소속보다 민주당 후보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후 진도 유세에서는 “잡났든 못났든 부모를 원망할 수 없다. 잘나도 내 아버지, 못나도 내 어머니다. 잘나도 내 아들이고 못나도 내 아들 내 딸”이라며 “민주당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쩔잖나”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흥으로 이동해서는 “여당은 무슨 뜻인가,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한다”며 “장흥이 발전하려면 예산을 많이 갖고 와야 한다. 여당이 유리한가, 야당이 유리한가, 무소속이 유리한가”라고 했다.

순천 유세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인지상정”이라며 “예산으로 보 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순천을 발전시키려면 필요한 법을 정비해 통과시켜야 하는데 무소속 때문에 많

은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계열 전직 대통령들의 지방선거 지원 등판을 겨냥, “감방에 있거나 감방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닌다”라고 했다.

이어 “윤(윤석열)·이(이명박)·박(박근혜), 윤석열 부활을 꿈꾸는 윤(이재명)·이(이영)·박(박근혜), 이 사람들이 민주당주의를 공격하고 부정부패하고 헌법을 공격했다”고 했다.

김 호 기자

전남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상황 폐쇄회로로 공개”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누구나 폐쇄회로(CC)-TV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유권자는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 통합관제센터도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했다.

관의사전투표 회송용봉투는 우편집중국과 배달우체국을 거쳐 구·시·군선관위로 전달된다.

구·시·군선관위는 회송용봉투 수량과 봉합 상태,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확인한 뒤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이 과정에는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거나 입회한다.

우체국은 선거일인 6월3일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매일 구·시·군선관위에 회송용봉투를 배달한다. 구·시·군선관위는 회송용봉투가 도착할 때마다 같은 절차를 거쳐 접수·투입·보관 작업을 진행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 뒤 정당추천 위원과 개표참관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표소로 이송해 개표한다.

6·3지선 네거티브 난무·법적공방 격화...사법리스크 후폭풍 우려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남·광주 곳곳에서 네거티브 비방과 흑색 선전,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격화하며 선거 후 단체장 사법리스크 후폭풍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의 과거 카지노 도박 의혹을 둘러싼 연일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도박 의혹 당사자인 김 후보와 이를 지적·비판하는 경쟁자 이정선 후보와 장관호 후보가 서로 고소·

고발을 주고받고 있다.

지역 교육시민단체도 최근 카지노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정선 후보를 각각 도박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 측 캠프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의 유권자에게 발송할 불법 선거 공보물을 무더기 발송하다, 선관위에 현장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순천시장과 담양군수·강진군수·신안군수 선거도 후보 간 네거티브 비방과 고소·고발전으로 얼룩

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순흥도 순천시장 후보는 현직인 무소속 노관규 후보의 재산 증식과 관련·금품 선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노 후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이 현직인 담양군수 선거도 혼란 양상이다.

민주당은 탈당 후 선거에 나선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와 김태성 신안군수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도 기자

李정부 1년...계엄 혼란 극복하고 경제 정상화 美관세 선방-중동상황 딛고 도약 발판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 4일 출범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 과제는 경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통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각하게 위축돼 있던 경제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4일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자금을 지급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성장 공식도 새로 됐다. 정부는 현재 2% 아래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로 반등시키겠다는 ‘진짜 성장’을 핵심 국정 목표로 설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컨트롤타워’로 임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주도하

는 ‘초혁신경제’를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에만 10조1000억 원을 투입했다.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이재명 정부는 약령 개성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이 주주 친화적인 경영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그 결실은 국민과 함께 나누는 투자 방법론도 채택했다.

지난 1년간 대표적인 위험 요인도 적지 않았다. 특히 노딜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최대 위기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5개월 가량 이어진 협상 끝에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협의를 이끌어냈다.